

# 핵 개발 노림수냐, 타협 위한 전술이냐?

2003년 1월 23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의실에서 북한 핵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 참여한 분들은 한국원자력학회의 신재인 회장, 한국국방연구원의 신성택 전력발전연구센터장, 한국수출입은행의 배종렬 선임연구위원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세계적인 흐름과 북한의 의도, 우리 정부의 대처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2003년 1월 23일 과총 회의실에서 열린 북한 핵 관련 토론회 장면.

**장소 :** 과총 회의실

**일시 :** 2003년 1월 23일

**참석자 :**

신재인

한국원자력학회 회장

신성택

한국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센터장

배종렬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위원

**신재인** | 현실적으로 북한 핵 문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는 무엇을 '북한 핵' 이라고 하는지 그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북한 핵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1994년도에 북한과 미국이 맺었던 제네바협정 이전의 핵 문제가 있을 것이고, 다음은 최근에 북한이 '농축 우라늄을 만들고 있다' 해서 다시 문제가 된 제네바 협정 이후의 핵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1994년도 이전의 북한 핵 문제하고 그 다음의 핵 문제의 의미를 이야기해주시죠.

**신성택** | 제네바 핵 합의 이전의 북한의 핵 개발은 1958년 조·소원자력협정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1960년에 소련이 연구용 원자로를 북한에 주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실제로 핵문제라는 '문제'를 붙인 것은 1992년 4월 13일께 북한의 영변에 있는 것을 NHK가 방송한 뒤 MBC, KBS가 방송하면서부터 '북한 핵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재인** | NHK를 북한이 초청했나요?

**신성택** 북한이 '우리가 이 정도 된다' 하고 터뜨렸다고 볼 수 있죠. 그때 나타난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5메가와트 원자로입니다. 그 전에 1991년 12월 31일 남북한 간에 '한반도 비핵화선언'이라는 것을 했는데, 그 비핵화선언은 '남과 북이 핵 개발을 하지 말자, 핵무기를 갖지 말자'는 요지였습니다. 당시의 핵 개발은 우리늄을 농축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한 플루토늄에 의한 방식을 이릅니다. 이 두 가지 다 '하지 말자'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선언'의 요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북한이 핵 개발하다가 국제사회에 발각되었고 미봉책으로 북한과 미국 사이에 협정을 맺고 동결해왔어요. 북한이 '핵 개발이 아니고 원자력을 개발한다'고 했기 때문에 신포에 경수로 일체(KEDO)를 지어주기로 하고 동결한 것입니다. 그 후 2001년 10월 3일 캘리가 북한에 들어가서 파키스탄에서 농축 장비를 사들인 것을 지적하니 북한이 핵 개발을 시인했는데, 그것이 앞에 말한 제네바핵합의 이후의 재처리 방식이 아니고 농축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 핵'은 제네바핵합의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는 플루토늄, 재처리, 이런 키워드에 의한 핵 개발, 그 이후는 핵 동결 해제, 고농축우라늄에 의한 핵 개발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신재인** | 1994년 북·미 간의 제네바합의 이전의 북한 핵 문제는 연구용 원자로에서 타고 남은 핵연료를 재처리, 플루토늄을 추출해서 핵폭탄을 만드는 문제였는데 그것을 북한이 비밀리에 하고 있다가 문제가 돼서 북한의 주요 핵시설을 동결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북한의 핵문제는 우리늄으로 핵폭탄을 만들기 위한, 농축우라늄을 제조하는 과정의 시설을 북한이 시인함으로써 나온 것이라고 요약이 됩니다. 그런데 북한이 일본 TV에 공개한다든지, 캘리가 갔을 때 당당하게 '우리는 핵 이상의 것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 핵문제가 우리 안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

고 있는데, 그렇다면 북한이 이 문제를 세계에 알리거나 또는 공유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북한이 왜 핵문제를 공개적으로 내놓고 있는지, 혹은 북한 내부의 다른 문제하고 연계돼 있는 것은 없는지, 아니면 국제사회를 겨냥한 어떤 목적이나 의도가 있는지 이야기해주시지요.

**배종렬** | 북한의 핵문제는 기술·안보적인 측면보다는 정치·경제적인 측면에서 조명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좁은 의미에서 핵문제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고 좀 넓게 핵문제를 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994년에 미·북 간에 핵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북한이 원했던 것은 매년 50만 톤의 중유 제공과 대미관계개선, 나아가서 미·북 국교정상화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공동선언을 이행하고 남북회의에 참석한다는 조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1990년대 초반 소련의 몰락과 동구권의 체제변화, 중국과의 관계에서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에 처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세계 언론에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을 가장 괴롭히는 부분이 전력문제였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 스톱이 돼서 북한의 경제 시스템이 거의 붕괴단계로 갑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측면에 봤을 때, 부시 행정부가 등장해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합니다. 2002년 9월 20일, 북한이 신의주 특별 구상을 발표한 날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제네바합의의 파기 책임이 북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게도 있다는 것인데 그와 관련한 북한의 주장을 소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다음의 논의를 위한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제네바합의에서 경수로를 2002년에 1기, 2003년에 2기를 지어주기로 되어 있으나, 그 이행이 늦어짐으로써 2003년은 100만 킬로와트, 2004년부터 200만 킬로와트의 전력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며, 이것이 기본합의문 제1조 위반이다. 둘

째, 미·북 간의 정치·경제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는 조항인데, 거꾸로 미국이 경제 제재를 넘어 북한을 '악의 축'에 포함시켰으니 이것이 제2조 위반이다. 셋째,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고 북한을 핵 선제공격 대상에 포함시켰으니 이것은 제3조 위반이다. 넷째, 제7항에 의거하면 경수로의 터빈과 발전기를 포함한 비핵부품들의 핵사찰을 시행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는데, 지금 북한한테 핵사찰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이 4가지 사항의 위반이 미국 측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미 제네바합의가 파기됐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미국이 중유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결국 북한도 제네바합의를 지킬 수 없겠다'라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켈리 특사가 방북했을 때 "제네바합의가 파기되었다"라고 얘기했고 이후에 강석주가 "제네바합의가 매우 위태롭다"하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신재인** | 그러면 두 가지 문제점이 도출됩니다. 하나는 최근의 북한 핵문제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우리 농축시설을 건설하는 일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추진해왔던 일인데 핵 자체로 본다면 94년에 맺었던 제네바합의를 위반한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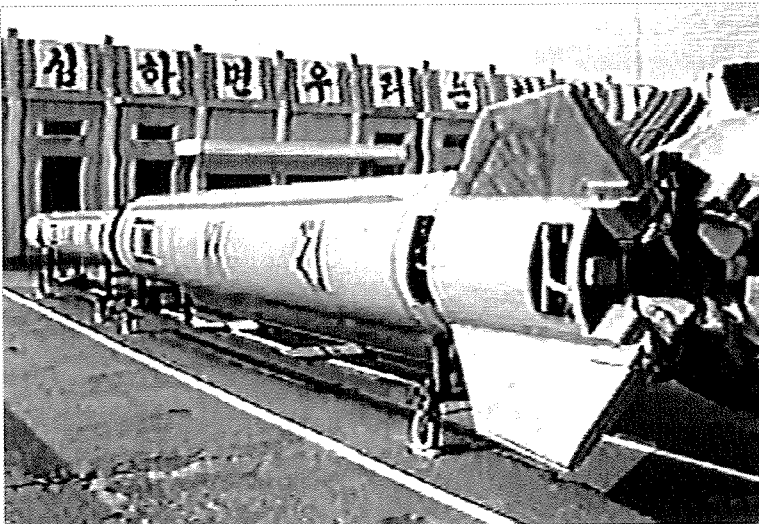
입니다. 미국 측 입장에서는 "북한이 제네바합의를 이행하려는 태도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북한 측은 "제네바합의는 미국이 먼저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문제를 계속 밖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실제로 북한이 핵에 대한 기술이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인프라가 완벽하게 돼 있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밖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어떤 협상 또는 타협의 물꼬를 트는 실마리를 만들기 위한 것인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의 의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죠.

**배종렬** | 북한 측이 주장하는 '제네바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4가지 책임'에 대해서 미국 측의 반박도 대단합니다. 경수로를 지어주기로 한 문제는 북한이 출발할 때 켈라룸푸르회담 때부터 농장을 부리기 시작했고, 1995년부터는 협상 대상을 한국이나, 미국이나 하면서 농장을 부렸고 그 다음에 북한에 들어가서도 잠수함이 왔느니 안 왔느니 하면서 농장을 부렸고, 서해교전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또 신포의 공사장에서 봉급을 배로 올려달라고 주장해서 늦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악의 축'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도 미사일 수출, 잠수함 사건 등 북한의 외교적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미국은 북한을 선제공격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부시 정부가 작년에 내놓은 <핵태세 준비 보고>를 보면 앞으로 만약 9.11사태 같은 것이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핵을 안 쓰더라도 미국이 '핵을 써야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끼면 전략핵무기라도 쓰겠다 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NPT를 탈퇴한 것입니다. NPT에 가입을 하면 국제원자력기구의 핵 사찰을 받아야 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핵안전조치협약에 걸리면 그것은 NPT에 관련된 거니까 NPT를 탈퇴하면 거기서도 벗어나게 된다는 게 북한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네바협의를 위반하고 나온 것. 제네바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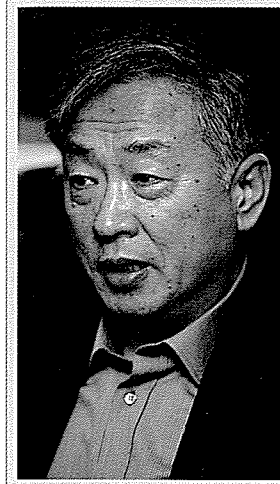
북한이 1999년 공개한 2단식 미사일. 우리에게 는 '대포동미사일'로 알려져 있다.



합의 3조 2항에는 '비핵화를 성실히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에 앉으면 굉장히 궁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문제는 쉽게 안 풀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재인** | 핵문제가 쉽게 안 풀린다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북한이 핵문제를 제기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고 관계가 있어요. 제네바합의를 어느 쪽이 먼저 깨뜨렸느냐 하는 것은 지금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변수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당사자인 북한이 어떤 의도로 핵문제를 활용하고 있는가'인데 이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재까지도 깊게 분석된 자료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농축한다는 일은 외국이나 주변국에 비밀리에 하기에는 너무도 힘든 문제예요. 많은 회귀성 화공약품을 구입해야 하고 수많은 시설들이 필요하고 엄청난 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농축 방법은 산 속에 숨어서 몰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그것을 추진했다는 이유는, 제네바합의나 NPT 등을 위반을 하면서까지 무언가를 보여줄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만약 북한에 어떠한 의도가 있었다면 그 목표를 달성하면 핵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고 만일 그 의도가 달성되지 못하면 계속 어떤 방향으로 문제가 증폭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원하는 진짜 의도가 무엇이나를 짚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배종렬** | 미국·중국·인도 등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7개국입니다. 7개국 모두 나름의 논리를 붙여서 핵 개발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기술만 있으면 핵 개발을 하려 합니다. 핵은 재래식 무기와 달리 상당한 억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재래식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다거나 국제기능올림픽을 휩쓸었다 해도 이웃나라 또는 상대국가에서 심하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핵무기라는 것은 우리나라 농축시설이나



신재인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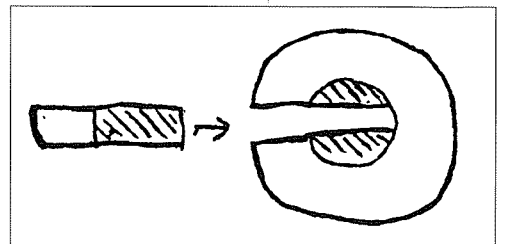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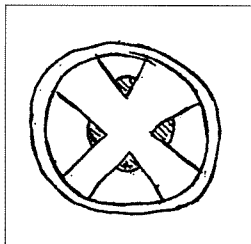
북한의 핵문제를, 북한이 의도하고 있는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타협, 또는 어떤 해결을 위한 능동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서 주변국가의 의도까지 파악하는 상당히 다면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재처리시설만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만 주어도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북한은 이를 어느 정도까지 노출을 시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일차적인 의도는 체제유지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성—김정일 이렇게 대를 이어 내려오는 체제, 그런 체제는 세계 어디에도 없으니까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핵무기 개발의 기술적인 면을 어느 정도까지 세계에 보여주지 않을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과거처럼 영변의 원자로 같은 시험 발전로 하나 보여줘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농축시설 공개를 시인하게 된 거지요. 이러한 것들을 '기술적인 시인'이라고 하는데 '더 보여주어야 더 믿게 된다'는 논리였던 것 같습니다.

**신재인** | 북한이 대외협상에 지렛대로 활용을 하면서 어떤 파워를 갖기 위한 하나의 증표로 보여주었

폭죽형 핵폭탄 초기 개념 약도(아래왼쪽). 총류형 핵폭탄 초기 개념 약도(아래)



다는 말씀인데... 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 국민들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기술적인 파워를 보여줌으로써 국민들 사이에 어떤 내부적인 콘트롤 파워를 키워나가는 목적도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러면 협상파위를 키워나가는 대내적인 국민 콘트롤이든 보여줌으로써 얻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 얻는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경제적인 지원입니까? 아니면 안보 보장일까요?

**신성택** | 그 문제를 조망하기 위해서는 김정일 시대를 3단계로 나누어서 고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4년 7월에 김일성이 사망을 했는데 김일성 사망 이후에 김정일은 김일성의 유언통치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97년 동아시아에 금융위기가 난 이후에 노동당 총비서로 취임하면서 김정일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김정일이 등장하면서 새롭게 내놓은 포부가 강대국 건설입니다. 이 강대국 건설론은 1998년 1월 1일 당의 일꾼들을 모아놓고 김정일이 장시간 이야기한 것입니다. 98년 1월은 김정일이 경제부문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정책을 내놓은 시기입니다.

국가체제의 개편이 98년 9월에 이루어지는데 바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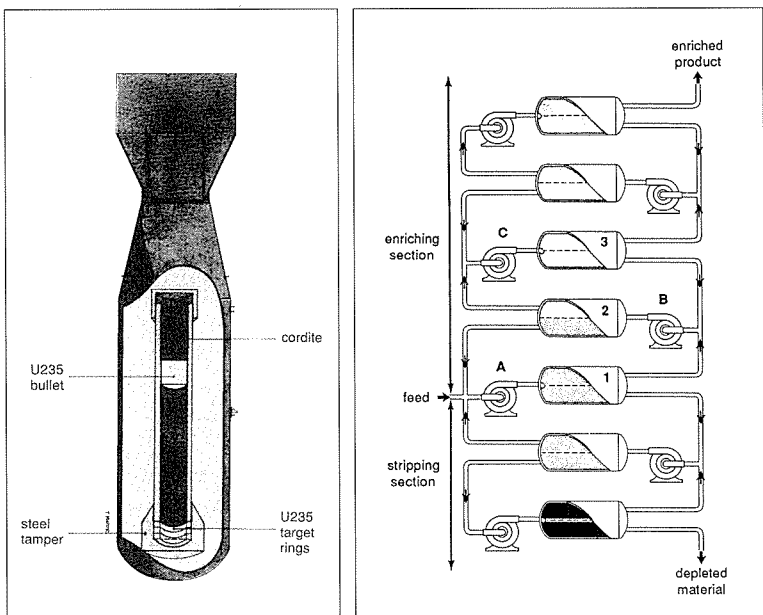
그 국가체제 개편 전, 98년 8월 30일에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하였습니다. 김정일 시대를 열어가는 신호가 대포동 미사일 발사였습니다. 그 이후로 금강산 관광 해로가 열리고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하고 조명특사가 미국을 방문해서 대통령을 예방하고 또 미·북공동성명이 이루어지면서 클린턴 대통령이 방북까지 약속하게 되게 됩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것이 부시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최근의 핵문제는 농축우라늄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는데 북한은 지금 플루토늄방식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NPT를 탈퇴하게 되니까 1994년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아직 타협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는데 그러면 1994년 제네바합의문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합의로서 북한의 핵문제가 다시 논의될 수 있는 구도입니다. 또 하나의 구도는 북한이 실제로 핵 개발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럴 경우에 하나의 모델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식 해법의 등장입니다. 과연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개발을 묵인할 것인가, 묵인하지 않는데도 김정일이 핵 개발을 강행할 것인가. 현재까지의 페이스를 보면 전자 쪽에 비중이 실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핵의 완전한 포기라는 것은 힘들다고 봅니다. 94년도와 같은 형태의 NCND 비슷한 형태로 핵문제가 타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정일 시대를 열면서 들고나온 것이 '성분정치'라는 것입니다. '성분혁명' 정도라고나 할까요. 2003년 1월 1일 신년사에 김정일은 다시 '성분정치'라는 기치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94년의 제네바합의를 파기하고 다시 새로운 합의를 만들자고 두 가지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NPT 탈퇴를 하고 난 이후의 불가침협정 얘기는 들어가고 '핵 개발할 의도가 없다. 단지 전력 생산용으로의 원자력 기술을 가동한다'는 것입니다.

유추해보면 김정일 시대를 맞이해서 정상국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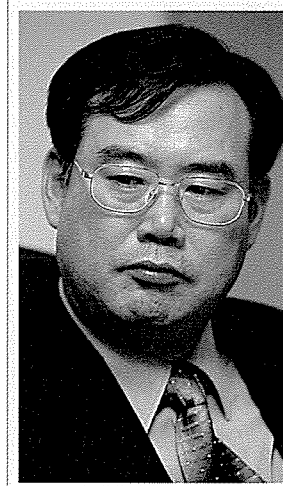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 폭탄 '꼬마' 약도(아래). 우라늄 농축 공정도(아래 오른쪽).



지향하고 싶은데, 경제발전에 필요한 전력생산은 북한 내부적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외부에서 얻어와야 하는데 미·북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힘들다. 그러면 경제발전에 제동이 걸리니까 이번에 다시 94년 합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합의를 제안함으로써 북한을 도와달라. 하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던지는 것이 아닌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문제를 보려면 94년 북한의 상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94년 북한은 핵동결을 시작하면서 그 대가로 반대 급부를 얻어냈습니다. 그것은 3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중유 50만톤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둘째는 경수로 2기를 지어달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식량지원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중유제공 문제만이 깨졌기 때문에 최근에 북한이 NPT를 탈퇴하면서도 제네바합의를 파기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또 미국도 제네바합의가 완전히 끝났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타협의 여지를 두면서 최근 미국 언론들이 새롭게 제기하는 것이 전력보상론이라고 합니다. 사할린가스를 제공하고 다른 나라에서 중유를 좀 주는 것이 어떠한 이야기도 나오면서 다시 타협국면으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것이 새롭게 타협으로 가기 전에 사전에 서로 기싸움을 하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배종렬** | 파키스탄은 묵인될 수가 있었습니다. 파키스탄은 인도하고밖에 갈등이 없었습니다. 파키스탄을 묵인해주어도 중국이나 말레이시아·태국 등 주변국가들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파키스탄과는 전혀 다릅니다. 일단 남북한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이 말은 한국도 핵 개발을 해야겠다 라는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는 얘가지요. 핵 펀치의 사정권에 들어가는 일본도 핵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도미노 현상이 우려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파키스탄을 묵인해주는 것처럼 북한도 묵인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성택 박사

*북한이 우라늄 농축이라는 잠재적 위험을 보여주면서 미국하고 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논리를 분석해보면 결국 타협의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네가 믿을 수 있는 수준의 체제보장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정권유지를 위한 경제적 토대를 갖추려는 의도입니다.*

북한 핵의 가장 큰 부분은 핵폭탄의 보유 여부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그 누구도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또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고 관련된 인프라도 상당히 갖고 있지만 핵무기를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신성택** | 지금 분명한 것은 최근에 문제가 됐던 우라늄 농축시설은 아직도 만들지도 못했고 또 우라늄 농축시설로 만들어놓았던 우라늄폭탄은 소위 말하는 한계점이 핵폭탄보다 낮기 때문에 북한이 우라늄 폭탄을 1단계 만들 능력이 있다고 말하기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제네바합의 이전의 플루토늄방식 핵폭탄을 만드는 문제는, 북한에 상당한 기술



북한 핵 문제를 커버스토리로 다룬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와 타임 지 표지.

수준이 있어 '만들려고 했으면 만들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보편적인 인식입니다.

**배종렬** | 제네바합의 이전의 플루토늄 핵 개발 상황을 봤을 때 기술적으로는 상황론으로든 개발의도도 50% 되고 능력도 50% 된다고 봅니다. 고농축 우라늄에 의한 핵폭탄 개발은 의도는 50% 되지만 능력은 50%보다 낮다고 보는 것이 보편적인 상황입니다. 의도는 높고 능력이 안된다면 그 위협은 수준이 떨어지는 겁니다.

**신재인** | 기술문제도 언급해주십시오.

**배종렬** | 북한의 핵폭탄 개발능력은 플루토늄 쪽에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이미 운전한다고 말하는 원자로나 플루토늄을 제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형태의 하이드로에 원자로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된 플루토늄을 갖다가 순도 높은 플루토늄만을 뽑아내는 과정을 재처리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 북한은 이미 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런 물질들을 합쳐서 핵폭탄을 설계하고 제조를 하는 것인데,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능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옛날부터 구소련에서 훈

련을 받았거나, 특히 파키스탄과 협력하면서 상당량의 자료와 교육훈련을 통해서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제작해서 실험을 할 수 있는 단계도 상당부분은 보완되고 있지 않나 싶고요. 그러나 우라늄 폭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재료와 기술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성택** | 능력부분은 두 분이 말씀하셨으니까 의도 부분에 대해 다른 쪽 시각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지도층은 미국에 대해서 걸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94년 김일성 주석이 죽고 난 이후에 많은 주민들이 굶어죽었어요. 북한의 경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입니다. 그 계획경제의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어버렸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도부가 느끼는 중압감이라는 것은 상당했을 것입니다.

특히 부시 행정부가 등장한 이후 미국은 세계정책 차원에서 북한을 굉장한 걸림돌로 보고 있습니다. 부시 행정부의 스타일로 미루어 북한을 공격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따라서 방어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일로서는 '성분정치·성분혁명'을 주창하면서 미사일이든지 핵을 보유해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무기로 해서 체제보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확실하게 체제보장을 한다면 핵을 포기할 용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개발에 들어가지 않은 우라늄 농축은 잠재적 위협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잠재적 위협을 보여주면서 미국하고 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논리를 분석해보면 결국 타협의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네가 믿을 수 있는 수준의 체제보장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정권유지를 위한 경제적 토대를 갖추려는 의도입니다. 미국과 관계개선을 해야만 국제시장으로 상품을 팔 수 있다고 북한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발전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 김정일이 내놓은 정책을

북한의 김일성광장에서 NPT 탈퇴를 지지하며 반미 시위를 벌이는 북한의 학생들.



신성택

보면 작년 7월 1일 경제관리 조치를 해냈고 그 다음에 9월 20일에는 신의주 특구를 홍콩식으로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개성공단도 개발하겠다, 금강산도 특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앞으로 정상국가를 지향하겠다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의 지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배종렬** | 의도는 곧 협상을 유리하게 끌어들이는 매개체가 되는 것이고, 협상을 했을 때 얻어내는 보파리의 무게는 곧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플루토늄, 재처리, 농축 등 눈에 보이는 능력 뒤에 북한은 핵 운반 수단인 장거리 미사일 개발 시위를 했습니다. 스커드는 수출하고 있고 노동 미사일은 배치돼 있고 대포동 미사일은 1차 실험이 끝난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협상 보파리를 키울 때 유리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신재인** | 플루토늄 폭탄을 만드는 시설은 제네바협약에 의해서 동결이 되어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북한이 새로운 핵 파위를 키우는 카드는 우리나라 쪽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우리나라광산은 이미 개발된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북한의 핵시설을 보면 이미 북한 내에 있는 우리나라광산에서 우리나라광석을 뽑아내서 우리나라 핵폭탄 물질로 쓸 수 있는 농축우라늄을 만들려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결된 플루토늄 시설하고 관계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다른 카드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우리나라 폭탄을 개발하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다시 플루토늄 폭탄으로 돌아갈 빌미를 제공받기 위한 것이라는 가정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나라 기술수준은 어디까지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은 원자력 발전과 방사선 의학, 농업적·상업적 이용 측면에서 상당한 기술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5강 이내에 들어갈 것입니다. 특히 원자력과 핵융합에너지를 미래의 어떤 에너



배종렬 박사

북한 핵의 가장 큰 부분은 핵폭탄의 보유 여부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그 누구도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또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지만 핵무기를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지원으로 쓰려고 하는 부문은 상당히 높은 기술수준에 와 있습니다. 이같은 기술적인 능력을 배경으로 우리는 핵문제에 대한 확산을 막고 모든 국가들이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데 구심점이 돼서 일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평화적 이용 부분은 선진국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는 것입니다.

**배종렬** | 이제 종합정리를 해주십시오.

**신재인** | 우리는 북한의 핵문제를, 북한이 의도하고 있는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타협, 또는 어떤 해결을 위한 능동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북한 핵문제에는 우리만 개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외의 주변 국가들도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이해관계들이 동일하지 않을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우리는 주변국가의 의도까지 파악해가는 상당히 다면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단순히 정치적인, 외교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총체적으로 활용해서 국가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리 허주희** | 사이언스올제 기자